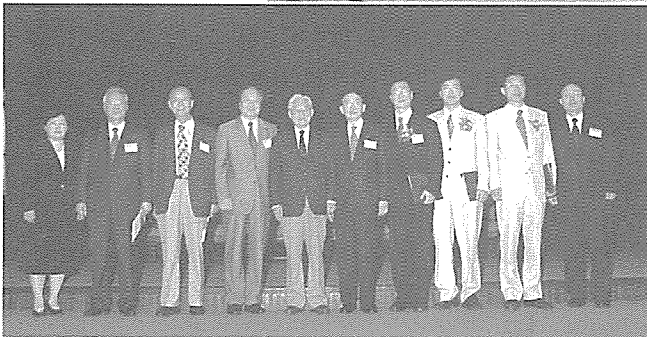


‘생명공학의 해’ 기념 생명공학종합학술대회 개최



‘생명공학종합학술대회’
개회식과 발표장면



주요 참석자
들과 수상자
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해” 설정 원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생명공학종합학술대회”가 지난 9월 5일~6일 이틀간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과총이 주최하고 생명공학관련 국내학술단체, 연구소, 산업체 등의 전문가 3백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지놈프로젝트와 프로테오믹스 ▲생물지놈연구와 분자유종 ▲바이오벤처산업 등 3개분과에서 총 14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개발 성과를 검토하고 세계적 생명공학연구 추세를 점검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전략적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관련 애로기술의 타개와 산학협동에 대한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맞아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명공학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인용빈도수가 높은 高在英(울산대의대교수), 金永峻(연세대 이과대교수), 柳誠彦(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3명이 「생명공학 우수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도 가졌다.

‘폐기물 지하처분을 위한 암반공학’ 워크숍 열어

과총은 한국암반공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주관하는 ‘2001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학술대회 추계워크숍’을 지난 9월 7일 개최했다. ‘폐기물 지하처분을 위한 암반공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워크숍에는 국외초청 발표 4건, 국내초청발표 6건, 일반발

표 4건 등 총 14건의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내용은 방사성폐기물 및 산업·생활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국내외 사례, 전망, 정책 등에 관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한 2백30여명



의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건의

최근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근본골격(안)은 생명산업이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과학보다는 윤리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법안이다. 이에 본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진하여 생명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면서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생명윤리 기본법 시안은 과도한 규제로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 기본법 시안은 생명윤리의 잣대로 추상적인 위험성을 부각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건강에 관한 국민 기본권 침해, 기존법률과의 마찰, 생명과학 연구 중단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현재 난치병 환자와 같이 미래 의학기술에 한가닥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명의 환자와 환자 가족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 **생명과학 연구관리 시스템의 확보**: 인간복제 금지와 같이 시급히 규제해야 할 사항만을 정하고, 그 외 연구관리는 기존 법률 및 관련

학회 규정을 통하여 위험요소들을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생명과학 연구 경쟁력 저하 우려**: 배아복제 연구의 금지는 세포의 발생과 분화 등 기초연구 분야의 침체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경쟁력을 크게 낙후시킬 우려가 있다.

-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필연성**: 동 시안은 윤리적 관점에서 과학 연구방향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성체 줄기세포 연구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이들 두가지 연구의 유용성이나 대체 가능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이다. 현재 수많은 난치병 치료를 위해 질병관련 유전자의 기능해석과 세포분화 과정의 정확한 이해가 배아 및 성체의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유전자 변형동물 연구 제한의 부적절성**: 유전자 변형 동물의 연구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경우와는 달리 질병연구에 필수적이다. 시안의 유전자 변형 동물의 허가제는 현재의 질병연구와 신약개발 연구를 도외시하는 비현실적인 조치이다.

- **유전체 정보 연구의 활용과 생명특허**: 이 시안 역시 기존의 법률 검토 없이 지배하려는 초법적인 규제사항으로 향후 관련 기술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심화시킴은 물론 지적재산권 보장도 외국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 **외국의 사례**: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외에는 단독법안으로 생명윤리를 다루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시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도 줄기세포의 연구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UN 산하 유네스코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년간 이를 검토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 생명 연구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강요된 합의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생명과학의 건전한 발전과 윤리문제를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①